

2024 임팩트그라운드

미래비전 계획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4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미래비전계획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사단법인 녹색연합" 미래비전 계획서

■ 제 1 장 조직소개

● 조직개요

대표자 및 이사회 명단			
● 우경선 상임대표 (법무법인 자연 대표변호사,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 박그림 공동대표 (설악녹색연합 대표, 설악산국립공원지킴이국민행동 공동대표) ● 원 정 공동대표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한가람문화재단 이사장) ● 윤정숙 공동대표 (60+기후행동 운영위원) ● 조현철 공동대표 (예수회 신부, 서강대학교 교수, 비정규노동자센터 꿀잠 대표) ● 정규석 사무처장 (실무 총괄자로 상근하는 임원)			
설립년월일	1991. 6. 6 녹색연합 창립 2009.9.28 사단법인녹색연합 설립	상근직원 수	30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 19 길 15(성북동)		
법인유형	☐ 재단법인 ☒ 사단법인 ☐ 비영리 민간단체 ☐ 비영리 임의단체 ☐ 공공기관 ☐ 사회복지법인 ☐ 기타 ()		
홈페이지	www.greenkorea.org	모 법인명	해당없음
공익법인	Y	주무관청	환경부
조직의 설립목적			
녹색연합은 '생명존중, 생태순환사회, 비폭력평화, 녹색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생태, 생활, 환경갈등 현장에서 활동을 펼칩니다.			

● 조직의 수익비용 현황 (단위 : 백만원)

- 설립 후, 누적기부금 총액 (~2023) : 총 31,444,000,000 원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본부	1,035	1,128	1,063	1,053	1,106	1,052	1,125	1,208
지부	0	511	564	581	621	661	758	799
합계	1,035	1,639	1,627	1,634	1,727	1,713	1,883	2,007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누적
본부	1,180	1,251	1,267	1,440	1,888	3,242	2,418	21,456
지부	956	852	1,004	658	762	639	622	9,988
합계	2,136	2,103	2,271	2,098	2,650	3,881	3,040	31,444

- 최근 3 년간 수익비용 내역

	2021 년(연말)	2022 년(연말)	2023 년(연말)
수익 총계	3,404	4,741	3,352
재단 지원금 총액	628	1,407	534
비용 총계	2,898	3,132	2,904

● 주요 사업(3 개 이내)

사업명	사업 내용 (한 문장으로 기술)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기후위기와 인간의 간섭으로 위협받는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산양과 제주 바다의 연산호, 유리창에 충돌하는 야생조류 보호활동을 진행하고 고산침엽수 모니터링과 멸종위기종 지정을 촉구합니다.
기후위기 대응활동	녹색연합은 생태계와 우리 일상의 기후위기를 직면하고 그 심각성을 알립니다.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변화를 요구하며 시민과 함께 행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합니다. 탈핵과 탈석탄으로 정의로운 관점에서의 에너지 전환을 요구합니다.
자원순환 활동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합니다. 배달 플랫폼에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 도입, 키오스크 텀블러 선택항목 추가 요구 등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변화의 사례를 만듭니다.

● 키워드 / 조직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키워드를 3 개 작성해 주세요.

Ex. #환경 #IT #기술 #사회복지 #알권리 #성소수자 #인권 #장애인...

#생물다양성 #제도변화 #현장성

Brianimpact ImpactGround

■ 제 2 장 문제정의와 문제해결 프레임워크

● [문제정의]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

필요성과 중요성을 중심으로 기술 (왜 문제이고 누가 이 문제에 대해 영향을 받는지 설명)

1. 공유지의 비극 : 환경수용성과 오염자부담원칙의 갈등

2021 년 제주에서는 <제 2 공항 건설>을 둘러싼 특별한 여론조사가 있었다. 제주도와 도의회, 도민들이 제주 제 2 공항 건설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수렴 방식에 합의했고, 국토교통부가 그 결과를 정책결정에 반영하기로 한 공론 조사였다. 지난한 토론과정 이후에 도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제 2 공항 건설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처음 제 2 공항 사업계획이 발표되었을 때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공항이 아니라 제주가 포화상태'라는 환경 쟁점이 적극 제기되면서 여론이 역전된 것이다. 환경적으로 사업의 적절성, 입지의 타당성을 따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도 제주 제 2 공항 계획은 3 차례의 보완을 거치고도 최종 '반려'되었다. 환경부는 반려 이유로 제 2 공항 건설시 법정 보호 야생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숨골 지형 훼손 등을 제시해 내용상 '부동의'였다. 제주의 독보적인 자연환경 가치를 두고 미래에 대한 모색과 숙고 끝에 내린 도민들의 민주적 결정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 2 공항을 추진하려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가능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종합개발계획에 반영했고, 당시 거대 양당 대선 후보자들은 공론화 과정을 통한 도민의 결정은 안중에도 없이 '제 2 공항 건설'과 '사업 검토'를 정치 표심을 잡는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민주적 절차와 합의에 대한 훼손은 물론 2050 년 탄소중립 선언을 해놓고도 탄소흡수원을 밀어내고 대규모 탄소배출을 장려하는 모순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제주는 일찌감치 '에너지전환과 전기차 보급'을 중심으로 '탄소 배출 없는 섬(Carbon Free Island)' 정책을 시행했지만, 10 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탄소배출이 늘어나 한계에 부딪혔다. 연간 관광객이 1,500 만 명으로 10 년 새 두 배 증가하고 유입인구가 늘어나면서 전력수요, 폐기물 발생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해안부터 중산간 지역까지 관광시설이 들어서면서 지하수 오염, 오폐수로 인한 연안 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태다. 폐기물과 오폐수 처리시설을 늘린다고 유한한 섬의 환경수용성이 커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생태계 감당 한도를 넘어선 과잉관광과 개발은 결국 제주도민과 다음 세대가 막대한 비용과 부담으로 고스란히 되돌려받을 것이다.

오염자 부담원칙과 '공유지의 비극' 이 연결된 예다. 이것은 거의 모든 환경문제와 그 환경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 양상에서 드러난다. 만약 서식지를 파괴하는 개발사업이 야생동식물이 설 자리를 빼앗는 서식지 파괴 비용을 현재와 미래까지 계산해 사업자에게 온전히 부과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이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아 인류가 초래하는 생물다양성 위기는 나아질 기미가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로 계산되는 환경 비용과 부과 방법은 합당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이익은 일부에게 편중되지만 비용은 미래세대를 포함해 국민 모두가 부담한다. 불합리하다. 그렇다면 모든 환경문제에서 '오염자부담원칙'을 법제도로 단단히 하고, 또 통용되는 상식으로 더욱 공고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2. 깨진 유리창 효과 : 무력한 보호정책

'그래도 되는 땅은 없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그래도 되는' 곳으로 무관심하게 훼손된 공간이나 '그래도 되는 것'으로 보잘것 없이 치부되는 존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설악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개발 악몽은 2010 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이다. 각 보호구역의 근거법들은 지정취지는 다르지만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강력히 제한하여 자연유산을 미래세대를 위해 보전하고 계승하자는 공적이고 사회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정치 손익 계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논리는 보호 정책보다 늘 앞섰고,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은 4 차례나 사실상 정당한 절차 내에서 취소를 이끌어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본안에 조건부 동의하며 사업을 허가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곳을 중심으로 유리창은 계속 깨져나갈 것이라는 '깨진 유리창 이론'과 같이 환경문제가 갈수록 파편화되고 다변화하는 양상이지만, 실제 그 유형은 과거부터 여전히 반복되는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거짓 조사, 부실 조사를 방치하고 아주 미미한 솜방망이 처벌이 일반화된 탓에 사업자가 하는 환경영향조사는 그 자체로 불신의 대상이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증식하는 문제도 그냥 손 놓고 있었던 탓에 국제적 망신거리가 된 지 오래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의 막개발을 오랫동안 방치하면서 이젠 훼손된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환경문제 중 이런 유형이라면 해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손 쓰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다면 다른 선택지를 찾아야 하지만, 아직 기회가 있다면 먼저 유리창을 갈아 끼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될 일이다. 멸종위기야생동식물 관련 법률의 벌칙 조항을 강화하고, 행정기관이 개발사업을 바라보는 기준을 일관성 있게 가져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로 사회적 약속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당장의 편리나 무관심이 환경적으로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잠재적 영향력을 알릴 수 있는 효과적이고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3. 지역 이기주의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만드는 변화의 오해

흐르는 강물을 두고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존재한다. 행정, 지역주민,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미래세대 등 이해당사자는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도 중앙 중심의 물관리 정책을 '유역 거버넌스'라는 개념을 가져와 변화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유역 거버넌스'가 현장에서 물의 주인이 마치 지역주민 또는 지역 거버넌스의 이해당사자들로 국한된다는 억측 또는 오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니면 끼어들지 말라는 식의 주장이나 지역주민의 의견을 가장 최우선으로 반영하겠다는 정책결정자들의 태도는 강을 해당 지역의 자산으로만 이해하는 전형적인 언사다. 그러나 우리 강은 물관리기본법에도 '모든 사람과 동·식물 등의 생명체가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로 규정하고 있듯이 지역민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공공재다. 그러기에 녹색연합은 전국민들을 대상으로 <강의 친구 365> 캠페인을 제안하여 4 대강의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현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물리적 거리가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둔갑해 정치와 행정의 논리로 활용되는 예는 강원도의 자산으로 둔갑한 설악산국립공원, 제주도의 관광상품으로만 취급되는 천연보호구역 문섬 등 수두룩하다. 우리 자연이 특정 지역의 자산으로만 취급된다면 망가짐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 자연은 모두의 공공재로서 충분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

지역성을 토대로 지역주민의 이해가 중요한 경우도 많다. 제 아무리 환경적으로 이롭고, 필요한 시설일지라도 누가 수용성의 주민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 만약 발전시설이 우리 지역에 들어올 경우 이해당사자 주민은 수혜를 입는 도시민이어야 하는가, 사업이 벌어지는 구체적인 공간의 지역민이어야 하는가. 콘센트만 꽂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전기를 쓰려고 느닷없이 마을 한복판에 송전탑을 받아들여야 하는 지역민의 불편과 절규를 이해하고 에너지 정의를 고민하도록 돕는 것, 책임을 나누도록 요청하는 것! 이것이 도시에 있는 녹색연합의 역할이다.

● [프레임워크] 우리 조직이 사용하는 프레임워크(문제해결 모델)

프레임워크 소개 : 타겟 및 접근 방법 등

1. 현장에 기반한 객관적 데이터 수집으로 공론화

#활동가중심_현장운동 #현장의 소리로 문제제기

녹색연합 자연생태 활동가에게 일 년에 등산화 두켤레는 필수적인 조사 장비이다. DMZ 일원의 민북지역, 향로봉부터 지리산까지 백두대간, 설악산부터 경북 울진에 이르는 산양

서식지, 그리고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는 징후와 증거가 있는 곳에 달려가 기록하는 현장 활동의 특징을 반영한다. 2022 년 3 월 경북 울진 대형산불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들어가 오랫동안 관계를 다져온 지역주민 지원과 멸종위기 야생동물 산양 서식지 복원이 대책에서 빠지지 않게 행정을 독려한 것도 녹색연합 자연생태팀이다.

녹색연합이 2023 년에 창립한 해양전문기구,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활동가들은 모두 중급이상의 자격을 갖춘 스쿠버다이버이다. 직접 공기통을 메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기후변화의 증거인 산호 백화현상을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천연기념물 연산호의 변화를 기록한다. 관광용 잠수함이 바닷속에서 천연보호구역을 시나브로 파괴한 흔적을 언론에 알리고 주무부처에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더 큰 훼손을 막기 위해 국회, 문화재위원회 등 입법과 행정기관에 정책 개선을 요청한다.

이 밖에도 발전소, 재활용 수거장, 프랜차이즈 카페, 배달음식점 등의 현장의 소리로 문제를 제기하고 현장 안에서 해결의 단초를 찾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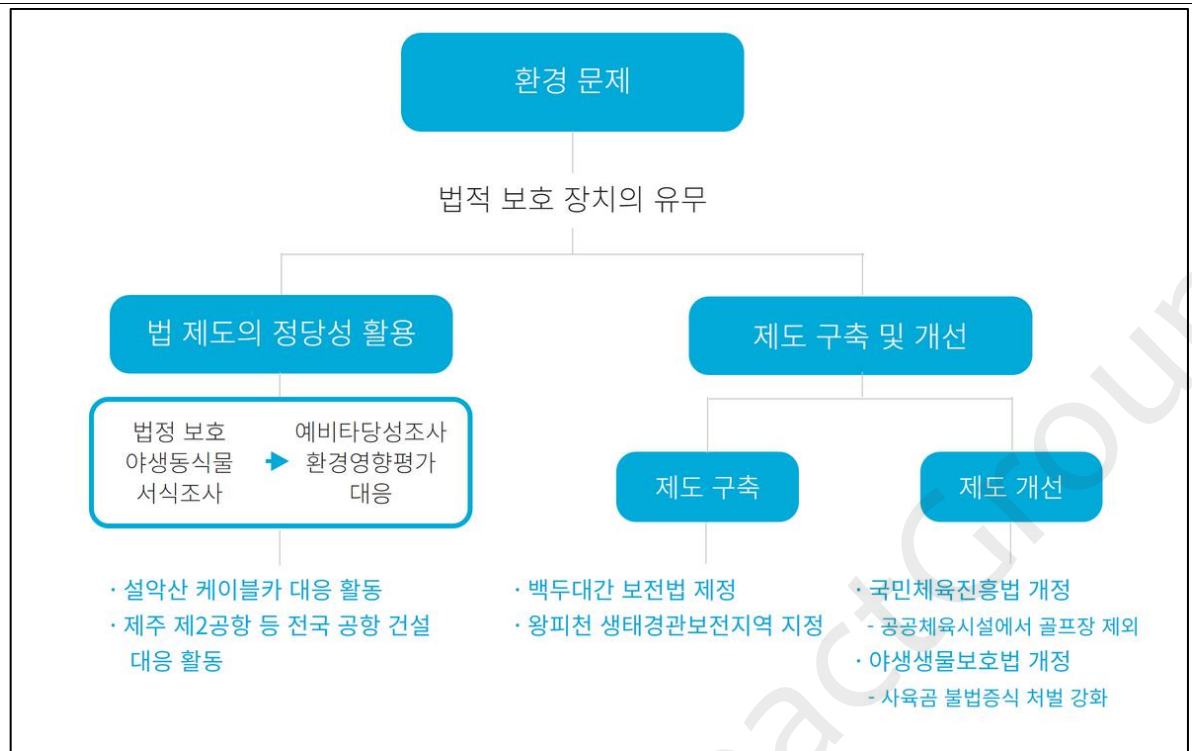
2. 항구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한 캠페인 설계

#정책대응 #제도개선 #지속성있는_보호장치마련

현장의 소리로 문제를 공론화하며 지속가능한 대안을 목표로 문제해결 전략을 수립한다. 직접적인 위협요인 제거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보호장치 마련으로 공간(서식지)과 존재(야생동식물, 지역주민 등)에 가치를 부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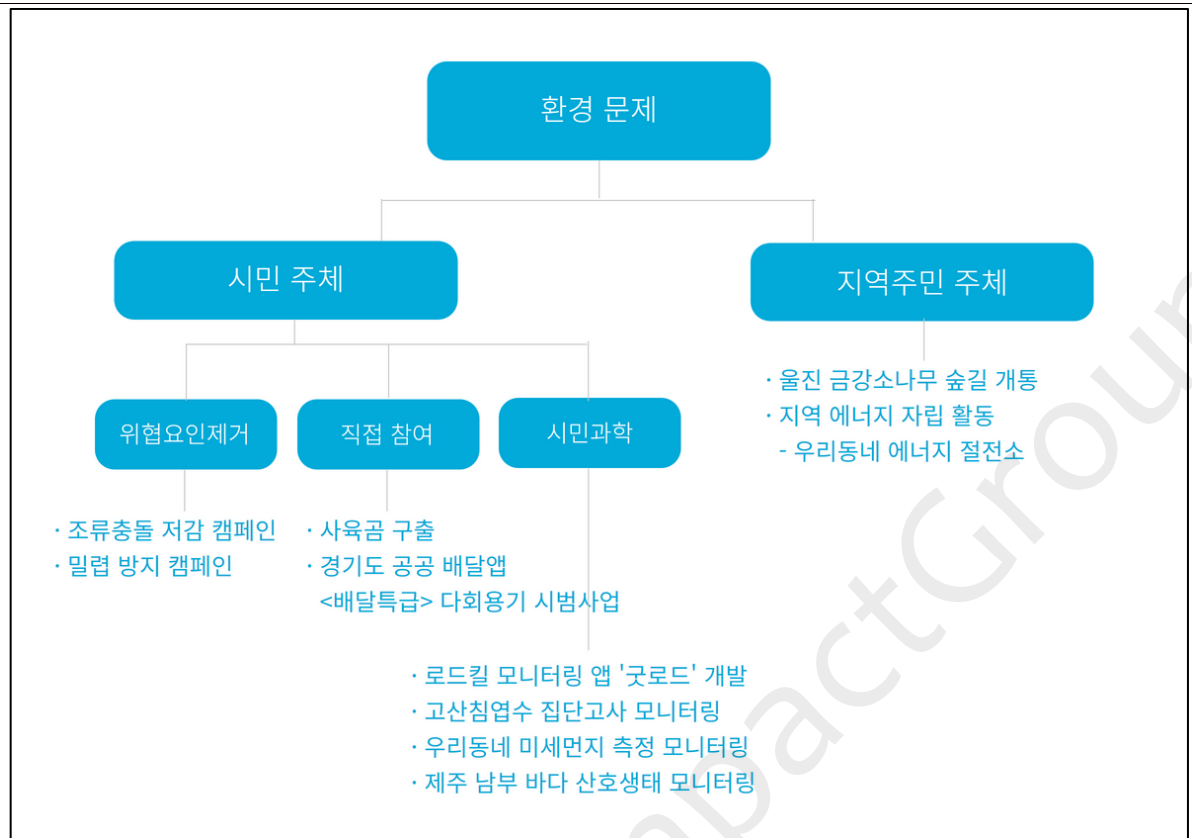
(1) 법 제도 활용을 통한 캠페인

- 법 제도의 정당성 활용 : 개발 현장이라면 법정 보호 야생동식물 서식조사, 식물상과 식생 조사 등 현장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행정절차 안에서 언론, 입법기관(국회 등)과 함께 정책 대응을 펼친다.
- 보호제도 마련 또는 개선 : 보호 제도가 미비해 생물다양성이 파괴되는 현장이라면 중·장기 모니터링을 계획하고 실행해 우리의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급선무다. 그렇게 보호지역을 지정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새로운 법 제도를 구축한다.



(2) 시민과 지역주민 주체의 보호기반 마련

- 지역주민 주체의 변화 : 지역주민 주체 생태계 보전이 필요한 곳이라면 지역주민과 단단한 관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주민이 보전 주체로 서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내 최초 예약탐방제 트레일,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이 만들어지기까지 활동가를 3 년 동안 지역으로 파견하고 마을 법인을 만들었던 것이 그 예다.
-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 녹색연합의 시민과학 프로그램은 더 많은 시민이 일상에서 환경활동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확장한다. 기후 위기로 사라지고 있는 침엽수 조사를 백패커들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다이버들을 대상으로 바닷속 생물 종 조사 메뉴얼을 만들어 정기적인 조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시민과학은 앞으로 환경단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고 이를 선도적으로 주도하는 곳이 현장중심 녹색연합이다.



캠페인의 유형이나 모습이 어떠하든 공통된 목표는 항구적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다. 모든 캠페인이 시민 캠페인에 그치거나 하나의 개발사업을 막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제도 개선을 포함하고 있는 이유다. 가능한 항구적 변화를 만들어 내는 것에 녹색연합의 역할이 있다.

3. 지역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확산 : 녹색연합 팀워크

#회원 #지역조직 #시민

기후 위기처럼 인식 변화와 삶의 대담한 전환이 절실한 문제는 방관자보다 연결자로서 전환하도록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첫머리에 배치하고 실행한다. 2019 년부터 '기후 위기의 증인들'이라는 표제로 MZ 세대를 겨냥한 컨퍼런스, 언론 기획 보도를 동시에 진행한 것도 같은 이유다. 이처럼 시민단체가 표방한 가치에 기반한 활동을 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것, 소위 홍보와 마케팅에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중요한 목적사업이다.

녹색연합은 주요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9 개 지역조직과 출판, 법률, 교육, 해양시민과학의 전문성을 갖춘 연합조직으로서 지역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단단한 팀워크를 갖추고 있다. 단일 조직으로 가장 많은 회원이 있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강점이다. 그러나 지역조직을 설립하고 싶다는 잦은 문의에도 지역조직을 늘리는 것을 지양하는 것이 녹색연합 입장임을 밝힌다. 생명존중, 생태순환사회, 비폭력 평화, 녹색자치 실현의 4 대 강령에 기초한 운동의

통합성은 지역조직이 많아질수록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광역지자체 중심의 지역조직을 유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단단한 가치 위해 세워진 조직에 대한 회원들의 지지와 애정은 다른 곳과 비교하기 어려울 만큼 대단하다.

기존 프레임워크와의 차별점(혁신점)

현장성 - 현장 전문성 기반의 활동가 운동력

현장 데이터와 지역주민을 고려한 활동가 중심의 운동력이 녹색연합이 내세우는 강점이자 특별함이다. 현장에서 추적한 증거로 세운 우리 가설을 과학적 논거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연구전문가들과 협력한다. 무엇보다 과학적 논거를 우리가 대변하는 가치 위에 두지 않는다. 현장성을 중시하는 운동은 기민함을 덤으로 가질 수 있다. 현장성은 곧 지역성이기도 하다.

완결성 - 스스로 지켜 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 법제도 개선

환경운동의 주체가 다양해지면서 법 제도 개선 또는 플랫폼 다변화를 통한 참여 확산 등으로 목표도 다양해진다. 녹색연합은 조직의 공동목표에 여러 활동가들이 기여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조직 운동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 2024 년 녹색연합은 현장 활동을 중심으로 29 명의 활동가들이 각각의 영역별로 항구적 변화를 추동하기 위해 법 제도개선까지 개별 운동의 목표로 삼는다. 운동의 완결성이 녹색연합의 강점이고 또 시민들이 녹색연합에 기대하는 바다. 물론 녹색연합도 다양한 운동의 주체들이 펼치는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을 차용하고 실행하는 시도를 게을리할 수 없다. 변화된 방식은 변화한 시민들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마지막 종착점은 법 제도 개선을 위한 귀결된다. 녹색연합 운동의 본질은 완결성(법 제도개선으로 항구적 변화 추동)이고 이것이 우리의 분명한 강점이다.

독립성 - 감시와 견제를 통한 균형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 후원은 받지 않는다.’, ‘정부 보조금은 받지 않는다.’, ‘회원 회비 중심의 재정구조를 유지 발전시킨다.’ 등 재정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재정 구조에 대한 자부심이 결국 재정 운영 건전성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이 때문에 수입 중에서 회원 회비 비율이 환경단체 중 가장 (월등하게) 높다. 시민사회는 권력 감시와 견제 역할의 워치독(watch-dog)의 역할에 충실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재정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활동의 독립성은 녹색연합의 역할을 규정한다. 현실적 장애와 대안 제시라는 딜레마에 빠지기보다 다른 삶에 대한 상상과 대담한 전환을 이야기한다. 물론 주장의 논거는 탄탄해야 하고 논거의 데이터는 정확해야 한다는 것은 현장 중심 운동을 하는 녹색연합에겐 기본이다.

●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성공의 경험

본 조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여 성공한 경험에 대해 기술

1. 법과 제도 변화를 통한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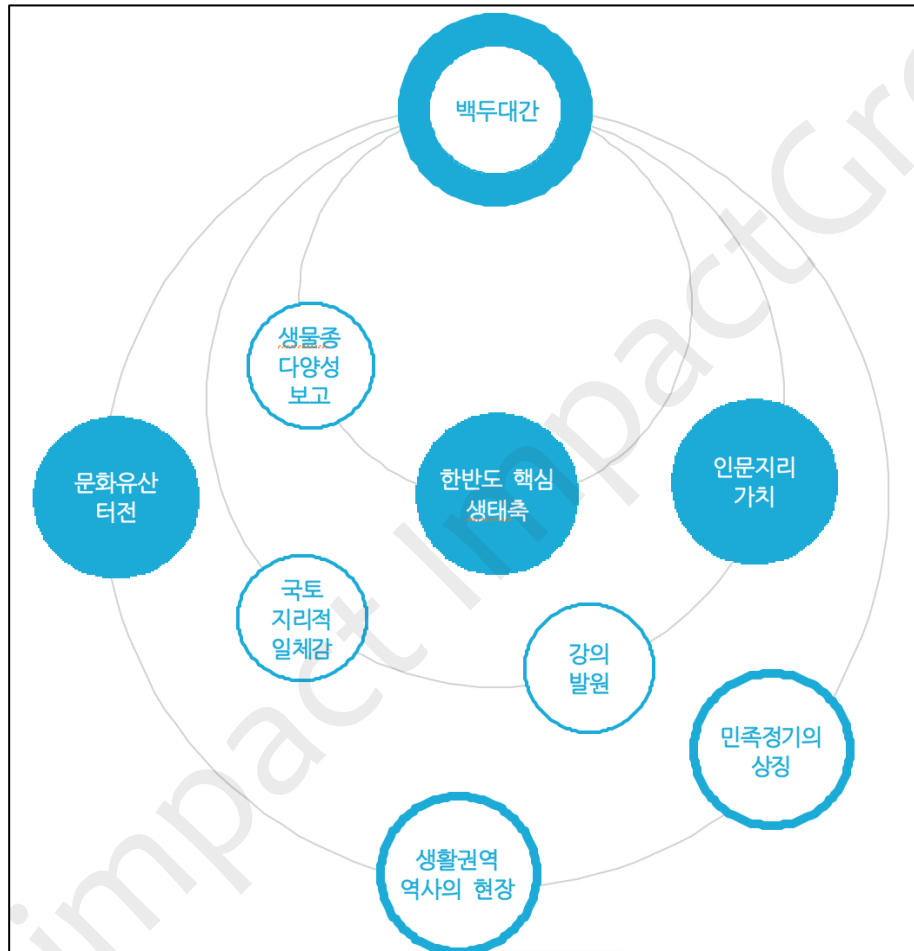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 **국내 최초의 백두대간 환경 대탐사로 현장 주도권 확보**
 - 1996 년, 2 년에 걸친 백두대간 환경조사 결과 무분별한 훼손을 낱알이 고발하면서 정부와 언론이 백두대간에 관심을 갖도록 이끔
 - 현장 조사 자료를 토대로 도로, 댐, 광산, 스키장, 대규모 농경지 등으로 훼손된 백두대간의 산림파괴 30 선을 발표하고, 이는 이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드는 중요한 근거가 됨
- **국토의 지리적 일체감 부여와 동시에 녹색연합 생태 보전활동의 일체감 시작**
 - 낙동정맥을 시작으로 백두대간에서 뻗어나간 정맥으로 조사를 확장하면서 백두대간이 곧 온 국토임을 알리고 인문 지리적 가치로 확대함
 - 정맥별 조사는 지역조직과 함께 현장성을 바탕으로 생태보전 사업 영역의 꼴을 갖추는 계기가 됨
- **보호법 제정으로 훼손지 생태복원의 근거 마련**
 - 2003 년 자병산 석회석 광산의 훼손지 복원 문제로 시작된 보호법 제정논의는 오랜 노력끝에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이어졌고, 비로소 백두대간은 법에 의한 지위와 공간의 실체를 확보함
 - '이제는 생태복원이다' 심포지엄을 통해 구체적인 생태복원 정책제안을 하고, 폐 군기지 복원, 도로로 단절된 마루금 생태축 복원의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짐
-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15 년 동안 지속적인 훼손 현황 고발**
 - 백두대간 종주가 등산 문화로 확산되면서 마루금 훼손도 심각해져 2001 년 전체 구간 현장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등산활동으로 축구장 75 배에 달하는 등산로에서 10 톤 트럭 1 만 3 천만대 분량의 토양이 유실되고 있음을 발표하고, 정부에 훼손지 복원을 요구함
 - 2016 년 같은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15 년 전보다 풀한포기 없는 나지 면적은 21%가 넓어졌고, 축구장 107 개에 달하는 면적이 등산로로 훼손된 것으로 드러남

- **공간의 가치에 주목하여 국가 생물다양성 핵심지 강조**

- 여러 기관에 흩어진 생물다양성 정보를 모아 생태지도를 펴내고 주요 권역별로 대표하는 식물과 동물을 선정해 생물다양성의 핵심공간으로 백두대간 중요성 알림

백두대간 남한 지역의 길이는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약 684km 에 달합니다. 마루금울 중심으로 면적 263,427ha 에 대해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가장 높은 수준의 생태보호구역으로 법적 지위를 부여하였습니다. 백두대간은 전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남북으로 긴 벨트형 보호구역이라 생물종의 남방한계선과 북방한계선이 교차하여 우리나라 생물 다양성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한반도에 서식하는 식물종의 33%, 1,241 종이 백두대간에 있고, 산양, 검독수리, 사향노루, 수달, 얼룩새코미꾸리, 산작약 같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39 종이 발견되었습니다.



(2) 웅담채취용 곰 사육 정책 폐지 활동

- **곰 사육 문제를 세상에 알린 첫 환경단체**

- 한국에서 곰 사육은 1981 년 정부가 농가 소득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재수출 목적의 곰 사육을 권장하면서 시작됨. 이후 곰을 비롯한 멸종위기종 보호 여론이 높아지면서 곰 수입은 1985 년에 중단됐으나 2000 년대 중반까지 증식된 곰은 1,400 여 마리에 달함. 곰 수출길이 막혔을 때 정부가 내놓은 농가의 손해보전 방안은 웅담 채취 합법화였음.

- 녹색연합은 2003년부터 곰사육 정책 폐지 활동을 시작함. 중국 및 국내 웅담용 곰 사육농장과 전통 약재시장, 온라인마켓 등 웅담 거래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입법 활동, 대중인식 캠페인, 대체 약재 연구 등을 통해 사육곰 문제를 공론화함.
- 2005년 <사육곰 및 웅담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사육곰 및 웅담 관련 한의사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87.1%가 웅담 채취 목적의 곰 사육을 반대한다는 여론을 확인함. 또한 2007년에는 단병호 의원과 <곰 사육 농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사육농가의 80%가 “적절한 보상이 있으면 곰 사육 폐지 정책에 동의 및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확인함.

● **실질적 변화와 함께 이뤄낸 사육곰 산업 종식의 과정**

- 시민도, 농가도 원하지 않는 곰 사육 정책 폐지를 위해 녹색연합은 국회와 함께 <사육곰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등 여러 차례 관련 법 개정을 위해 활동함.
- 이러한 노력들이 이어져 2014년에는 환경부와 함께 사육곰 증식금지 사업을 진행함. 더 이상 철장안에서 사육곰이 태어나지 않게 됨
- 정부는 이대로 곰 개체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정책도 폐지될 것이라 판단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녹색연합은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 기금을 모아 국내 최초로 사육곰 4마리를 철장 밖으로 구출함. 구출한 곰은 현재 청주동물원과 전주동물원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녹색연합은 ‘곰과 함께’라는 후속 프로그램으로 정기적으로 후원자들과 구출된 곰 보호시설을 찾아 생명존중의 가치를 상기시키고, 사육곰 문제의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요청하고 있음.
- 또한 곰을 불법으로 증식시키는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불법증식 처벌 강화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해냄. 사육곰 및 반달가슴곰 보호 시설(구레) 설치 예산 편성을 이끌어 냈으며, 2022년에는 환경부, 사육곰협회, 시민단체, 지자체가 함께 <사육곰 산업 종식 선언 협약>을 함으로써 2026년 1월 1일부터는 곰 사육과 웅담 채취를 금지하고, 남아있는 사육곰 보호를 위한 제도 변화를 이뤄냄.

2. 시민참여형, 시민(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변화

(1) 울진 산양 보호와 금강소나무 숲길 만들기

● **민관거버넌스의 결실, 주민참여형 숲길 제 1호**

- 2010년 개통된 울진 금강소나무숲길은 녹색연합과 산림청, 울진군과 지역주민이 협력한 국내 유일 예약탐방제 숲길임. 금강소나무 숲길은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제 217 호 산양 서식지 보전,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짐.

- 주민참여형 숲길 제 1 호 사례로, 지역 주민들은 기본계획 단계부터 실무협의회에 참여해 숲길 조성작업에 직접 관여했으며, 생태계 보전을 위해 하루 탐방객 80 명과 예약탐방제에 동의함. 금강소나무 숲길은 운영의 원칙으로 공정여행, 책임여행 등의 개념을 도입해 주민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함. 또한 지역 주민이 직접 숲해설사로 참여해 탐방객을 안내하는 등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음.

- **지역 주민 주체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 금강소나무 숲길이 위치한 울진 지역은 멸종위기 야생동물 산양의 국내 최남단 집단 서식지로, 산양은 2019 년 기준 전국에 약 1,300 마리가 남아있고, 이 가운데 120 개체 이상이 울진삼척지역에 서식함. 그러나 2010 년부터 10 년동안 울진삼척 지역 산양이 58 마리 폐사하는 등, 울진삼척 지역에 서식하는 산양은 밀렵과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울진 산악 지형의 특성 상 지역주민 협력없이 산양보호활동은 불가능함. 실제 동절기 산양 먹이주기 활동을 하고 탈진된 산양을 신고해 직접 구조 활동을 함께 펼침. 지역주민의 정기 모니터링과 탈진·폐사 산양 발견시 주민들의 신속한 신고와 안내로 울진 지역 산양을 구조하고 있음.

- **시민과학의 모범 사례, 시민참여형 야생동물 조사**

- 녹색연합은 해마다 자원활동가로 구성된 <야생동물탐사단>을 모집해 울진·삼척 지역에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음. 2011 년 울진·삼척 지역의 산양 전체 서식지 조사와 흔적조사를 시작으로 매년 산양 모니터링 및 구조 활동을 하고 있음. 2024 년 1 월 현재 13 기까지 운영되었으며, 활동을 통해 천연기념물 217 호이며 멸종위기종 1 급인 산양과 멸종위기종 2 급인 삵과 담비를 비롯한 여러 야생동물의 흔적을 발견하여 울진·삼척 지역 생태계의 우수성을 확인함.

(2) 시민참여형 캠페인으로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 활동

- **위협요인 저감을 위한 시민이 참여해 만드는 변화**

- 녹색연합은 2019 년 4 월부터 투명 유리창 조류충돌 문제의 인식 확산과 실질적인 피해 저감을 위해 <새친구> 캠페인을 시작함.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새충돌 사례를 수집하는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시민들이 함께 모은 데이터를 통해 박새, 멧비둘기를 비롯하여 천연기념물 참매와 새매 등 다양한 종류의 새충돌 사례가 발생함을 확인함

- <네이처링>을 통해 시민과학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충돌이 빈번히 발생하는 지방도 구간에 시민들과 함께 조류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캠페인을 진행함. 2019 년부터 시작한 이 캠페인은 2024 년 1 월 현재 8 기까지 진행되었으며, 회당 4-50 명의 참가자가 참여함
- 캠페인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새친구가 스티커를 부착한 서산 649 번 지방도 방음벽, 용인 함박초등학교 인근 방음벽, 제주 예래 초등학교 방음벽, 태안 몽산교차로 방음벽에는 스티커를 붙인 후 조류 사체가 10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함. 시민과학 활동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낸 가장 좋은 사례임

● **법과 제도 변화 견인**

- 2021 년 3 월,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 고시를 개정해 도로에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 새충돌 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함
-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연이어 조류충돌 방지 조례를 제정함. 2020 년 경남 창원, 충북 청주, 충주, 2021 년 광주광역시, 광주 남구와 북구, 충남 서산, 부산 남구, 경남 진주, 충남, 경기, 경기 시흥, 울산, 대구 동구 등 지금까지 15 개 기초, 광역 자치단체가 새충돌 저감 노력의 의지를 밝힘
- 2022 년 5 월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어 환경부가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추락 등 야생동물 피해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피해가 심각한 인공구조물에 대해 피해방지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 제 3 장 미래비전

●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어떤 요소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1. 사전예방의 원칙, 오염자 부담원칙을 법제도로 구현하고 통용되는 상식으로 자리매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생물다양성, 각종 난개발로 피해받는 지역주민 등 환경 현안의 중심에 '원인자부담원칙'을 법제도로 더욱 공공히 하며,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으로 세워야 한다. 그 중심에 대규모 개발사업과정에서 수반되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대한 거짓 부실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가 아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 피해와 오염을 최소화하는 장치로 작동하도록 한다. 2023 년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시민인식을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문제의 원인인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 2024 년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원인자 부담원칙과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본래의 의미대로 기능하도록 법 개정안을 만들고, 국회에서 발의되도록 한다. 국회와 시민사회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식, 행동할 수 있도록 활동한다.

2. 보호지역을 위상에 걸맞게 보호 관리 할 수 있도록 함

'깨진 유리창'처럼 방치되어 있는 환경현안을 발굴하고 당장의 편리나 무관심이 환경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그린벨트,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철새보호지역 등 난개발사업 앞에 부질없이 허물어지는 허술한 보호지역 관리 실태를 밝힌다. 국내 훼손실태와 더불어 해외 보호지역 정책 및 관리에 대한 교훈을 얻고, 육상, 습지, 해양 등에서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현재 국내 보호지역을 일관성있는 관리체계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3. 자연이 공공재이며 인류의 유산이라는 위상 정립

개인의 자산, 지역의 기후위기 시대, 생물다양성 회복은 중요한 과제이다. 자연환경은 개발을 통한 사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라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공공재의 의미와 기능을 충분히 담아 일방적인 편익을 차단해야 한다. 시민들의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위한 광범위한 캠페인과 그에 따른 재원이 필요하다. 바람, 태양, 강, 바다 등과 같이 명확한 자연의 산물뿐만 아니라 사유화 된 산림일지라도 공공재라는 의미부여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자연이 공공재라는 인식, 공공재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캠페인을 국내에서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자연의 주체성(뉴질랜드의 황가누이강 사례 등)과 공공성을 우리나라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때다. 임팩트그라운드 지원사업으로 자연의 권리,

공공재로서의 자연의 의미를 컨퍼런스, 온오프라인 캠페인, 자연의 권리 선언문, 문화 활동, 정책담론 생산 등을 통해 각인시켜낸다. 자연이 개인의 자산, 지역의 자산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해 인류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킨다.

● 지원금 사용에 대한 아이디어

지원금이 주로 사용될 분야와 사업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와 장기적인 미래비전을 기술

1. 네트워크 활용으로 지역 현장성과 정책 전문성 연계

- 녹색법률센터 법률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환경영향평가법, 보호지역 정책, 자원재활용 등 주요 환경 정책을 중심으로 한 환경 법률 정합성 연구 강화
 -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시민과 예비 법률가들을 대상으로 환경 법률 정보 제공과 교육 강화
- 생물종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야생동식물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으로 대규모 개발 사업 대응 전 현장 데이터의 사전 확보
 - 시민과학자 양성과 더불어 조사 방식의 표준화
 - 기후위기, 생물종 다양성의 의미를 담은 교육키트 개발과 현장 활용
- 에너지전환 전문가 네트워크 활용
 - 에너지기후정책 및 에너지정의 관련 전문가 그룹과 연계하여 기후 정의와 환경정의에 입각한 에너지전환을 꾀할 수 있도록 연구 협력
 -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전환 로드맵 제안

2. 운동통합성 기반의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심화

- 녹색연합이 다루고 있는 전국의 활동현장은 기후위기 또는 무분별한 개발과 같은 인간의 활동이 생물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드러내는 증거임. 이러한 기록이 국소 지역의 문제로 파편화되거나 지역 이기주의로 오용되지 않도록 통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생물다양성 보존의 사업 의제를 발굴, 문제인식을 확장하여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보함

- 공통 의제와 현장 중심의 역량 강화 : 해양포럼 등을 운영하여 의제별 운동 통합성을 기반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성을 함께 키우며 연대를 강화함. 육상, 습지, 해양 등에서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보호지역들을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시킴

3. 시민과학자 양성과 확장

- 문제해결을 위한 현장 데이터 생산 주체로 시민과학 활동 영역 확대
 - 시민과학자 양성 :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심을 두고 지구에 해가 덜 가는 방식으로 숲과 강, 바다에서 취미를 즐기는 이들과 함께 생물종 조사, 생태계 변화 조사로 육상 및 해상에서의 활동 영역과 대상의 확대
- 현장 기반 데이터의 이해(데이터 리터러시)와 활용 역량 강화
 - 시민과학자들의 현장 조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사 키트 개발과 활용
 - 기록의 축적(아카이빙)을 넘어서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시각화 시도
 - 생물종 정보와 조사 방법 제공, 위치 정보 기반의 조사 기록 등을 담은 조사 앱 개발로 온라인에서 누구나 활용이 가능하고 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오픈데이터화

4. 적극적인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홍보

- 강연, 전시, 컨퍼런스,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공공재인 우리 자연의 위상을 시민 삶속에서 높이고 시민의 참여 영역을 확장함
 - 다양한 강연 프로그램
 - 그린 컨퍼런스 : 환경 이슈의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고, 토론의 장으로 활용
 - 퍼포먼스 기획자, 예술가 등과의 협업으로 환경문제 홍보의 다각화
 - 매체별, 대상별 특성에 맞는 온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확대
- 녹색연합이 사회에 외치는 메시지가 영향력과 정부 협상력을 가지는 것은 녹색연합이 전국 회원 조직이며 녹색연합의 목소리가 곧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신뢰가 있기에 가능함. 피플파워(people power) 확대를 위해 전국 녹색연합의 회원 확대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함

● 지원사업의 성과 정의

임팩트 그라운드의 지원을 통해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성공'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 환경 정책 및 제도 개선 성과

- 환경영향평가협의제도 개선 : 오염자 부담원칙을 구체적으로 담고, 부실, 거짓 조사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보호지역 제도개선 : 자연공원법, 습지보전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보호지역이 공공재로서의 의미와 기능을 담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도록 함

● 시민 인식 전환

- 자연이 개인의 자산, 지역의 자산만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포함하여 인류의 유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공공재로서의 위상을 확립함
- 환경 오염으로 지역 주민이 겪는 불편을 지역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우리 공동의 문제로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인식 개선
- 오염을 일으킨 당사자가 책임자로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는 오염자부담원칙의 공감과 확산
- 당장의 편리나 무관심이 환경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인식하고, 일상에서 실천하는 환경 보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

● 시민과학 확산

- 시민과학 프로그램 개발, 정례화를 통해 현장성과 전문성 확산
- 육상, 해양 등에서 파편적이고 개별적인 보호지역들을 통합적인 관리체계로 전환시키기 위해 시민과학을 통해 만든 데이터 활용
- 종 정보조사, 오염조사 매뉴얼 제작 및 생태조사와 교육 키트 개발 - 일상에서의 환경활동가 양성

● 전국 녹색연합 회원 증가 추이

- 주요 활동 이슈를 중심으로 전개한 온오프라인 인식 개선 캠페인 성과지표로 회원확대 증가 추이 확보

●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에 대한 계획

Scale-Up 이란? 조직의 규모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

Scale-Out 이란? 조직을 분화/모델링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수평적 방법

Scale-Up

● 전담 인력 배치

- 목적 :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시민인식개선과 지역연대를 총괄하며, 보호지역제도개선에 주력하기 위함
- 계획
 - 전담팀 구성 (그린프로젝트팀) : 팀장을 포함,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및 시민인식개선과 지역조직연대를 담당할 인력 4 인 배치
 - 전담활동가 배치 : 해양포럼을 주관하며, 보호지역 제도개선방안을 담당할 인력 1 인 추가 배치.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및 지역조직과 소통하며 해양영역 운동 확장

● 전국녹색연합 회원확대

- 목적 : 녹색연합의 인지도 및 사회적 영향력 확대 및 재정독립성 안정화를 기하며, 피플파워와 위치독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 지역조직 기반을 강화하여 활동의 지속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음
- 계획
 - 2023 년 각 조직별 회원확대를 위한 자원 및 여건 조사를 바탕으로 조직 특성에 맞는 회원확대 프로그램 및 교육 진행
 - 전국녹색연합 공동브랜딩 광고
 - 지역조직 (대전충남녹색연합) 전화모금

● 전국녹색연합 활동가 역량 강화

- 목적 : 이론과 현장을 연결시킨 교육으로 활동가 역량 및 전국녹색연합 활동가 유대감 강화
- 계획
 - 현장 감수성 교육 : 현장조사와 기록, 글쓰기
 - 녹색순례 : 생태적으로 민감한 현장 및 환경현안지역을 순례하며 현장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과 공동의 해결방안 모색

Scale-Out

●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의 분화 및 안착

- 목적 : 제주도를 사업공간으로 하여 산호생태모니터링을 비롯 기후위기와 해양생물종 변화, 제주 연안해양 환경현안을 다루기 위한 전문기구를 설립(2023 년)하고 안착시킴
- 내용
 - 시민과학 산호탐사대 정기 운영을 통한 생태계 변화 추적, 산호 서식현황과 훼손 요인 생태자료 수집
 - 산호화 해양생태계 변화를기록하는 다이빙 홍보 및 활성화 시민과학 교재 개발
 - 산호 분포 지도 포스터 제작을 통한 산호 서식 및 가치 알리기
 - 해양보호정책 개선활동

● 디지털 기술의 활용

스케일업 또는 스케일아웃의 과정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기술

● 생물다양성 조사로 진행하는 서식지 공간 조사, 개체 조사 방식의 진화

주로 생태현장조사와 야생동물의 추적과 공간 조사를 위해 사용하는 무인센서카메라, 드론카메라 등은 저장매체, 탐지 각도, 탐지 거리, 렌즈, 화소, 해상도, 영상기능 등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객관성과 비교가능성 확보를 위해 모니터링에 다양한 조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 휴대용 전자기기 위치기반서비스와 SNS 를 활용해 시민과학의 확장

비전문가인 대중들이 협업하여 집단지성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과학적 성과를 만드는 것을 지칭하는 '시민과학'은 시민들의 SNS 해시태그(예:#돌고래) 목격담으로도 생태조사에 기여할 수 있다. 현재 녹색연합은 <새친구> 프로젝트로 야생조류의 투명유리창 충돌 현황을 '네이처링(naturing.net)'을 통해 기록하여 공유하도록 안내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이미지와 위치데이터를 수집해 전국 외래 거북 분포를 파악하고 있는 사례도 참고한다.